

'기후위기로 몸살 앓는 지구를 지키자'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위 등 4개 단체, 탈석탄법 제정 등 촉구

'기후위기로 몸살 앓고 있는 지구를 지키자'는 기자회견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과 전북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유남희 상임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유영진) 등 네 개 단체 회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지난달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탈석탄법' 제정과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명시한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등 네 개 단체 회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지난달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탈석탄법' 제정과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명시한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네 개 단체회원들은 "임계점에 다다른 기후 위기는 이미 동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을 일으키고 있으며, 시시각각 더 크고 강력하며 더 견디기 힘든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과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0%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 이상 향상시키며, 석탄 발전의 조기 퇴출 등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그 목표와 계획마저도 후퇴시키고 있으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 시점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지름길이며, RE100이라는 새로운 국제 무역 기준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대규모 석탄 발전의 원조국인 영국마저도 142년 만에 석탄 발전의 가동을 멈췄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 누구나가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법제화해야 하며, 시민주도 참여로 성장한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을 막는 '출력제한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 대책'과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보장제' 등의 친물을 끼얹는 조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법안"을 신속히 제정요구 서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하며, 정부

와 국회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석탄법'과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명시한 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정부와 국회는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참여자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우선구매 의무화법'을 마련하고, '출력제한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 대책'과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 등의 부당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탈석탄법' 제정과 '재생에너지 목표 법제화'와 '계통접속 우선구매 의무화' 등의 입법화를 목표로 전국 70여 개 시민 발전 협동조합이 결성한 조직이다. 한편,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도민은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지구가 병들게 되어 우리에게 양심있게 될 것"이라고 하며, "탄소중립이지만 신속히 기후 위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백광산업 새만금 제1공장의 새출발 환영'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기업 활동 전념 환경 조성"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달 31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공구에서 백광산업(주) 이차전지 전해질 원재료 생산 공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달 31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공구에서 백광산업(주) 이차전지 전해질 원재료 생산 공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만 9,000톤 규모로 양산할 계획이며, 향후 이를 10만톤 규모까지 확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의 필수 소재인 삼염화인(PCl5)과 오염화인(PCl5)은 전구체 및 반도체의 소재로서 공급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해 왔지만, 이번 백광산업(주) 새만금 제1공장 기공으로 국산화를 통한 공급망의 안정화, 기술자립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백광산업(주)와 같은 이차전지 기업과 산업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안정적인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새만금청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자세로 입주기업들이 편안하게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



'내년 예산 확보 위해 힘 모으자' 지난날 3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는 다짐의 화이팅을 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후 소회

"시민·재판부에 감사... 시정 공백 없도록"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달 31일 선거법 위반과 관련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그간 응원을 보내준 시민들과 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 소된 지 1년 11개월 동안 함께 아파하고 격려해 준 시민들의 덕분에 상고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현명한 판단으로 단절 없는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준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이학수 정읍시장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회를 전하고 있다.

이 시장은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전주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다룰 점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등법원에서 잘 설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중단없는 시정을 펼칠 수 있게 된 만큼 더욱 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는 매주 현장에 나가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있고, 부시장도 시정을 특별히 챙기고 있어 재판과정에서도 사업에 미비한 사항이나

부족한 점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선 8기 시장이지만, 민선 9기 시장이라는 각오로 더 열심히 시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특히 "이제 예산철이 돌아왔는데, 시민들의 경제·삶·농업농촌·어린이·청년 등 시민 행복도와 민생에 밀접한 예산들은 계속해서 늘릴 것"이라며 "앞으로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살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예산작업, 민생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시장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시민과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면서 "이에 보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눈, 제3의 눈으로 시정을 공청하고 투명하게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김대중 도의회 경산건강위원장, 익산 바이오기업과 소통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익산)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익산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 회의실에서 익산지역 바이오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자치도 바이오

방위산업과, 전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장, 익산시 바이오산업 담당 및 익산지역 15개 바이오 기업 대표 등 약 30명이 참석해, 바이오산업 규제 개선과 육성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장루·요루 장애인용 세척시설 설치

전국 공공청사·도내 최초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공공청사 최초이자 도내 최초로 장루·요루 장애인용 세척시설을 설치했다. 장루·요루는 대장과 소장 등의 소화기나 요관(尿管) 등의 비뇨기 수술 후 장과 요관 등의 일부를 몸 밖으로 유도하여 만든 변과 소변의 배출구를 말한다.

장루·요루의 경우 괄약근과 같은 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수시로 주머니를 비워주고 깨끗하게 씻어야 하지만 이 주머니를 비우고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춘 화장실이 국내에는 거의 없다. 이병도 의원(전주)은 지난 2022년 11월, 경기도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두 번째로 '전북특별자치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도의회는 이를 근거로 전국 공공청사 중 최초로 도내 최초로 청사 1층 남여 장애인 화장실에 장루·요루 장애인용 세척시설을 설치했다. 도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루·요루 장애인용 세척시설은 1일부터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

정례회 대비 연찬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지난달 31일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 1층 중회의실에서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오는 12일부터 진행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감사 방향 설정과 예산안 심사자료의 사전 분석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행정 사무감사 분야별 점검사항 등을 분석하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아울러 2025년도 실·국·월별 주요 현안 및 주요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날 31일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나섰다.

"쌀값·농산물 가격 정상화하라"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 천막농성 돌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나섰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2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 당 18만 2,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남은 11월, 12월을 포함한 수확기 평균 쌀값이 20만원도 안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날 31일 오전, 이원택 간사를 비롯한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쌀값 폭락 책임 윤석열 정부 규탄'과 '쌀값 및 농산물 가격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쌀

값 하락에 대해 농장·필름·품수 대책으로 일관한 결과 더 이상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쌀을 구매해왔던 농협 RPC의 적자가 올해까지 최근 3년간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에 농협조차 신속 매입을 꺼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쌀값 폭락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 농식품부 장관의 책임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대한 정부여당의 즉각 협조 △2024년산 쌀값 최소 20만원 이상 연중 유지 △정부 정책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농협의 손실 책임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 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수도권·비수도권 e스포츠 대회 세액 차등 감면

민주 김윤덕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 김윤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2022년 기준 수출액이 약 12조원으로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의 67.8%에 달할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스포츠(전자스포츠)경기단을 운영하는 기

업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감면하여 인건비,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사우디 등 해외 주요국은 이스포츠에 대한 수도권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국내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윤덕 의원의 개정안에는 이스포츠 종목과 관련한 경기대회를 운영하는 국내 법인에 대하여 e스포츠 대회의 경기 횟수 중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 운영 비용의 30%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수도권에서만 경기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운영 비용의 2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복희 기자